

[주간동향] 2006. 7. 6~7. 12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2006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 ❖ 농림부, 여성농업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 5대 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강화
- ❖ 제33차 여성정책포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여성' 주제로 개최
- ❖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인권위에 진정

❖ 2006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24개국 100여명의 한민족 여성과 국내 여성리더 250여명이 참석하는 2006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웨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리더 발굴 등을 위해 매년 전 세계 곳곳의 한민족 여성을 초청해 개최된다. 올해 대회에는 여성 CEO, 교육자, 법조인, 예술인, 공무원 등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4개국 110명의 해외 참가자들이 참가하며, 국내의 여성리더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멕시코 총선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노라유씨, 이탈리아 GSB S.R.L 무역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에는 최태지 정동극장장이 '글로벌 시대의 주체 차세대 한민족여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하며, 본회의에서는 '차세대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과 비전'과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민족 여성의 비전을 공유하고 세계 속의 차세대 한민족 여성리더 육성전략을 모색하는 심층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성세대와 차세대간, 국내 참가자와 해외 참가자간의 1:1 멘토링,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별, 전문분야별 실질적인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도 모색된다. 이외에도, 한인 이민사 사진과 중국 연변

사진작가인 이광평씨의 연변 조선족 인물 사진, 각 국가의 KOWIN 관련 활동사진 전시를 통해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활동상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는 이민 2세대 및 1.5세대인 해외 차세대 리더 50여명이 최초로 참석해 차세대 리더와 기성세대 리더간의 토론을 통해 차세대 한민족여성의 정체성과 여성리더육성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 여성농업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농림부는 7월 10일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 마련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여성농업인정책 20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국 1,420개 읍·면의 34%에 해당하는 476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5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되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초·중급과정의 정보화 교육에 여성농업인을 50% 이상 참여시키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키로 하였다.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경영컨설팅 등에 여성농업인이 20% 이상 참여토록 하고, 후계인력육성사업에도 여성농업인을 20%까지 우선 선정한다. '여성농업인 리더쉽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08년 개강을 목표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학과 신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려 나가며, 농기계·교통·재해 등 사고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와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목표 하에, 금년에는 15개 농림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림부는 농촌의 국제결혼실태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 5대 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강화

정부는 7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최근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4대 폭력 근절 대책'에 성폭력 대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적격 교사의 학생 체벌과 성폭행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경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학생에 대한 성범죄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징계에 의해 해임이나 파면된 교원이 다시 교원으로 신규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강화한다.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가 실시되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서지 및 학생 비행 예상지역에 교외생활지도단을 편성,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외출제한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범죄 수형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와 전문 치료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금품·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구속 325명, 불구속 5,596명 등 총 5,9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성피해가 3,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착취 1,030명 △불법 사금융 564명 △취업사기 508명 △불법 직업소개 195명 △과다 소개료 7명 등이며, 임금착취의 경우 총 17,468건을 조사해 39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 제33차 여성정책포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여성' 주제로 개최

한국여성개발원은 7월 11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제33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로마지 플랜 2010'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32조746억원의 재정을 투입,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이날 패널발표자로 나선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 계획이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중장기 대책을 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경 교수는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제거와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골자로 한 새로마지 플랜은 과거 정책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출산율을 상승시키려는 국가의 이해는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남녀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

했다. 즉 정부가 과거 펼쳤던 출산율 억제정책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한 여성 및 가족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눈에 띄는 출산율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기존의 성별분업은 남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남성들이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날 때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장기적 투자 계획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꾀해야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급진적인 정책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상임대표 역시 저출산 대책은 직접적 출산장려정책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등 근본적 사회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윤 대표는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출산율을 어느 정도 회복한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양육 수당을 주는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성고용 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남성의 가정 돌봄 참여 등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여성 임금 노동자에 대한 일할 권리 보장과 취약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인권위에 진정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나와우리 등 여성·시민단체 6곳으로 이뤄진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은 7월 11일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조장하는 국제결혼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동행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다른 국가의 문화를 폄하,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런 반인권적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의 13.6%에 달하는 등 국제결혼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 현재 등록 업체만 600곳을 넘어선 상태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여성적·반인권적 홍보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면서 업체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에 지난 한달 간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인권침해적 결혼광고물 증거사진과 328명의 서명을 첨부, 인권위에 제출했다.